

2020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서면 요구답변자료

2020. 10.

 국가철도공단

<목 차>

□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 더불어민주당

1. 김윤덕 위원	1
1. 변전소 노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3
2. 소병훈 위원	5
1.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강력 제재 방안?	7
3. 박영순 위원	9
1. 전차선 노동자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11
4. 조오섭 위원	13
1.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콘크리트 궤도 적용 여부와 향후 계획은?	15
5. 천준호 위원	17
1. 가족회사, 등기임원 중복 등 밀접관계 법인의 부정입찰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19
6. 허영 위원	21
1. 철도역사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지자체 비용분담 등 개선방안?	23
2.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삼척 지역 이주 단지 분양 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 명단?	24

○ 국민의힘

1. 김은혜 위원	27
1-1. 공단 퇴직 임직원 중 해원까지 및 근정 등 종합건축사사무소 재취업 현황?	29
1-2. 건축설계공모 결과 당선업체가 특정업체로 치우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30
2. 정동만 위원	33
1. 3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과 개선 방안? ...	35
2.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사고 조사 보고서, 사고 원인, 안전 시공 대책? ..	36
3. 하영제 위원	39
1. 활용계획 없는 유희부지의 용도폐지 및 기재부 이관 계획은?	41

□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 더불어민주당

1. 조응천 위원 49
 -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공단에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51
 - 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52
2. 김운덕 위원 53
 1. SR 및 코레일과 합동으로 철도시설 및 차량의 운행에 안전 관련 문제가 있는 곳을 조사하고, 상호 간에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55
 2. 입찰심사기준에 보유인력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56
 3. 노후 철도시설의 선제적 개량이 수도권 위주로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 57
 - 4-1. 철도건설 사업자로 관리 현황? 58
 - 4-2. BIM 설계 의무화에 따라 공단은 통합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 59
 - 4-3. 공단이 보유한 일부 서버와 스토리지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강 계획은? 60
3. 소병훈 위원 61
 1. 코로나 19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63
 - 2-1. 터널경보장치 등 안전설비와 관련하여 일반철도는 해당 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데 누가, 어떻게, 언제, 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지? 65
 - 2-2. 안전설비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해서 안전설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66
4. 김희재 위원 67
 - 1-1. 지난해 국감에서도 체결장치와 관련해서 불량 부품 납품, 시공문제로 공단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 받았는데, 지난 1년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69
 - 1-2. 잘못된 규격서를 5년간 방치하고 국민이 지적했어도 10개월간 방치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70
 - 1-3. 매년 안전불감증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71
 - 2-1. 매년 같은 시공사들이 돌아가면서 하자발생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입찰 시 제재를 해야 하자발생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72
 - 2-2. 공단이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까지 하는 주체라면 좀 더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하자를 줄일 것이라고 보는데? 73

5. 박상혁 위원	75
1-1.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 대비 착공이 얼마나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는지?	77
1-2. 재정절감을 위해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78
1-3.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분담률 확대나 선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79
6. 박영순 위원	81
1-1. 전차선 노동자들의 공단의 작업현장 위험 실태 폭로 기자회견,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입장은?	83
1-2. 전차선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84
1-3. 지난해 5건, 올해 2건의 재해사망사고가 발생, 기재부로부터 중대 재해 경고 조치를 통보받는 등 전차선 노동자 기자회견이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85
1-4. 국토부 장관 주재 「건설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9.22)에 공단도 참여 하였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86
1-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현장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87
2-1. 내구연한이 지난 무선통화장치가 불량인 경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89
2-2. 경부고속철도 열차무선설비의 조속한 장비개량을 통해 고속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90
3.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에 대전조차장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91
7. 천준호 위원	93
1-1.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동반성장 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였는데, 비정규직 포함 10명 내외로 근로인원이 증가한 기업을 고용증대 우수기업이라 할 수 있는지?	95
1-2. 동반성장 협력펀드 취지에 맞게 자금 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96
8. 허영 위원	97
1. GTX-B 열차의 춘천 연장운행은 기존 역사 보수 및 별도의 선로 개량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99

2. 철도역사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대에 지자체가 50%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는데, 향후 정부 예산이 100%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100
3-1.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삼척 지구 이주 보상과 관련하여 평당 분양가가 4배나 폭등하는 등 당초 협약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유?	101
3-2. 지금 책정된 분양가가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가액이라고 하는데,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단가를 산정하였는지?	102
3-3. 이 사안에 대한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대책은?	103
9. 홍기원 위원	105
1-1. 수서고속철도 지제역사는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107
1-2.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108
1-3. 작년 12월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향후 누수 발생 시 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109
2-1. 고속열차, 고속철도의 세계시장은 어떠하며 현재 우리의 개발력 수준은?	110
2-2. 세계에서 3번째로 400km/h가 넘는 고속열차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속철도 운행이 여전히 답보상태인 이유는?	111
2-3. 공단에서 400km/h급 고속철도 관련 분야별 기술용역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남은 과제는?	112
2-4. 400km/h급 고속철도 상용화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 구간이 최상의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113
3-1. 퇴직 임직원을 통한 철피아 부활 우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114
3-2. 최근 5년간 관리자급 이상 퇴직 직원 현황?	119

○ 국민의힘

1. 송언석 위원	125
1. 청렴 관련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와 청렴 이미지 개선 방안은? ·	127
2. 정동만 위원	129
1-1.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 및 개량이 계획 대비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131
1-2. 수도권 이외 지역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기간을 5년씩이나 잡는 등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132
1-3. 신설된 강릉선에도 수신 불량 구간이 있는 사유는?	133
1-4.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를 서두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설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34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더 불 어 민 주 당

김 윤 덕 위 원

<김윤덕 위원>

1. 변전소 노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시스템개량처TF 김동철 처장, 042-607-3801

- 공단은 변전소 노후화에 따른 열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철 전원공급설비(변전소)의 내용연수와 더불어 장애(고장), 운영 현황, 열차운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량대상 우선 순위를 반영한 「전철 전원공급설비(변전소) 중장기 개량 시행 계획(안)('20.08)」을 수립, 순차적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 노후 변전소 개량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등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인 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 * 향후 6년간('20下 ~ '26년) 10개 노후 변전소 개량추진 (추정예산 7,953억원)
- 아울러, 변전소 개량 시 전기설비 IoT 등을 반영하여 변전시설에 대한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변전소 개량 추진 예산 >

단위 : 억원

사업명	연차별		
	합계	'20.下	'21 ~ '26
합 계	7,953	494 <6.2%>	7,459 <100.0%>
고속개량	4,734	50	4,684
일반개량	3,219	444	2,775

* '20년 일반개량[추경예산(디지털 뉴딜)]에 300억원 포함

소 병 훈 위 원

<소병훈 위원>

1.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강력 제재 방안?

계약처 김태은 처장, 042-607-3721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항~삼척 구간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 ('20.10.16, '20.10.19)한 결과 2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원가보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하도급 점검 시 원·하도급사 면담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되도록 공단이 중재하겠습니다.

* 포항~삼척 15공구 하도급사 구산토건이 제시한 총 15억원 중 원도급사인 대우건설 측에서 8억원을 인정하여 5억원은 '20.9월 말 지급 완료하였고, 3억원에 대해서는 10월 말 지급 예정이며, 나머지 7억원에 대해서는 보전방안을 공단 중재 하에 협의 중입니다.

② 총사업비 변경승인 시점과 설계변경 시점 불일치에 따른 계약 변경 지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변경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총사업비 변경승인 즉시 계약변경 및 적기에 대가가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 공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대로 대금지급 지연, 불공정 특약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고발 조치하고, 신규 입찰 시 신인도 항목 감점 확대 등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 영 순 위 원

<박영순 위원>

1. 전차선 노동자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전철처 양인동 처장, 042-607-3501

- ☐ 위원님 서면질의와 중복되어 위원님 서면답변 1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오 섭 위 원

<조오섭 위원>

1.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콘크리트 궤도 적용 여부와 향후 계획은?

궤도처 윤증원 처장, 042-607-3331

- ☐ 현재 공단에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대하여 콘크리트 궤도 형식을 적용하여 기본설계('19.4.~'20.1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다만, 당초 기본계획(국토부)에는 콘크리트 궤도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는 자갈궤도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어 콘크리트 궤도가 반영된 설계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합니다.
-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콘크리트 궤도가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 준 호 위 원

<천준호 위원>

1. 가족회사, 동기임원 중복 등 밀접관계 법인의 부정 입찰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약처 김태은 처장, 042-607-3721

- ☐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대표자가 같은 경우에 한해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나, 친인척 등 소위 특수 관계 법인이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족회사가 동일한 입찰에 같이 참여할 경우 사전담합, 낙찰률 상승 등 공정한 입찰 제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 ☐ 앞으로 공단은 타 기관 사례조사 등을 통해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위 사례들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허영위원

<허영 위원>

1. 철도역사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지자체 비용분담 등 개선방안?

시설개량처 김용길 처장, 042-607-3781

- ☐ 위원님 서면질의와 중복되어 위원님 서면답변 2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2.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삼척 지역 이주
단지 분양 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 명단?

일반철도처 한상연 처장, 042-607-3481

☐ 관련 업무 책임자 및 실무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국 민 의 힘

김 은 혜 위 원

<김은혜 위원>

1-1. 공단 퇴직 임직원 중 해원까지 및 근정 등 종합 건축사사무소 재취업 현황?

건축설계처 진옥수 처장, 042-607-3951

- ☐ 최근 5년 이내 퇴직자 중 해원까지 및 근정 등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재취업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 사 명	성 명	근무기간	직위
(주)해원까지종합건축사사무소	박○○	2016. 7월 ~ 현재	전무
	정○○	2019. 1월 ~ 현재	부사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이○○	2018. 1월 ~ 현재	전무
	조○○	2020. 1월 ~ 현재	사장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조○○	2019. 10월 ~ 현재	전무
	윤○○	2020. 8월 ~ 현재	전무
(주)백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	2019. 5월 ~ 현재	전무

<김은혜 위원>

1-2. 건축설계공모 결과 당선업체가 특정업체로 치우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설계처 진옥수 처장, 042-607-3951

-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설계공모 결과 당선업체가 일부 특정업체로 치우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진건축사 제한 공모제도, 1사1공구 제도 강화, 설계공모 홍보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상세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강화

- '16년부터 소규모역사, 변전건물을 대상으로 연도별 1~2건을 시행하였으며,
- '19년부터 철도건설사업 노선별 1~2건 이상으로 강화하여 신진건축사 제한공모로 추진

*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 철도건축설계 경험이 없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만 45세 이하)들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건축설계공모 시 1사1공구 강화

- 발주시기가 유사한 설계공모 건은 공단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사1공구를 강화(2~3건 → 4~5건)하여 특정업체 치우침 해소

* 1사1공구 : 유사시기에 공모되는 설계공모 건을 모아 여러 건을 동일 시기에 공고하고, 업체는 1개 공모 건에만 작품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 설계공모 홍보

- 신규 건축사사무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홍보 협조 기관을 늘리는 등 홍보 강화로 많은 설계사 참여 유도

* (사)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조달청, (사)새건축

- 작년부터 설계공모 시 현장설명회를 시행하여 철도건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신규 건축사사무소 참여 적극 독려

* 현장설명회 : 공단 설계공모 참가의사가 있는 설계사들이 한자리에서 질의답변 등을 시행하여 의문사항 즉시 해소 및 자료 공유

정 동 만 위 원

<정동만 위원>

1. 3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현황과 개선 방안?

인사복지처 이현철 처장, 042-607-3641

- ☐ 공단은 보수규정 상 성과급 미지급 대상이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그 외 징계(견책~강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3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 17명 중 파면·해임된 직원 등 13명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감봉~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은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 징계 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

(단위 : 명, 천원)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4	1	-	-	1	2
금액	2,479	209	-	-	715	1,555

- ☐ 향후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교섭 시 파면·해임 외 3대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성과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2.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사고 조사 보고서, 사고 원인, 안전 시공 대책?

광역민자철도처 김현성 처장, 042-607-3381

- ☐ 발생 원인은 최종 보고회를 통해 규명 예정이며, 사고조사 보고서는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해당 민자사업의 안전관리는 실시협약 제33조(환경 및 안전관리)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주)의 의무사항이나, 공단은 사업 관리 담당기관으로써 안전관리 대책으로 정부 사고조사단(국토부 주관)에 참여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실시협약 제33조(환경 및 안전관리)>

사업시행자는 부록1 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 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 안전관리 및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객관적인 검증 등을 위해 정부 사고조사단 참여('20.04.13~)
- 사업시행자에게 안전관리 조직 정비 요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추가 배치(6명→9명, 중 3명) 요청
- 사고현장 시공업체 인력 추가 투입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 요청
 - 안전관리자(3명→6명, 중 3명), 안전감시단(3명→8명, 중 5명), 품질 관리자 추가 배치(2명 → 4명, 중 2명)하여 현장 상주 요청

- 공단은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사업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발주되는 민자사업(예: GTX-A, 2019년 착공)은 시공 과정 전반에 걸쳐 감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이 감리 계약을 직접 발주 및 관리하고 있으며,
- 앞으로는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철도가 안전하게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하 영 제 위 원

<하영제 위원>

1. 활용계획 없는 유희부지의 용도폐지 및 기재부 이관 계획은?

재산용지처 이재우 처장, 042-607-3811

-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용도폐지하여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 철도재산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매각대금은 교특세 세입으로 반영되어 철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 특별회계인 철도재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인계하지 않고 중앙관서(국토교통부)가 관리·처분하게 되어 있으며,
 - 기획재정부의『2020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특별회계 재산은 중앙관서에서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고려하여 장래 국가 철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활용계획이 없는 철도 유희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기재부 이관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국토부 및 기재부 등과 우선 협의하겠습니다.

- 아울러, 철도 유희부지는 국토교통부 「철도유희부지 활용지침 (15.7월 제정)」에 따라 매년 철도 유희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철도 유희부지 관리계획》

철도 유희부지 합계	활용부지	현재 미사용			
		소계	사용허가 검토 예정	활용, 자산개발 등 계획	활용계획없이 미사용
25,663천 m ²	16,455천 m ²	9,208천 m ² (100%)	4,210천 m ² (45.7%)	3,841천 m ² (41.7%)	1,157천 m ² (12.6%)

- 지자체가 도시재생, 도로·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 목적으로 철도 유희부지 매각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는 등 철도재산이 국민의 편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자체에 매각내역》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9월
필지(건)	1,669	242	366	752	309
면적(천 m ²)	1,096	150	253	546	147
금액(백만원)	191,390	27,961	47,745	76,566	39,118

□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별표 1. (특별회계설치근거법률)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 기획재정부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국유재산 관리체계

<p>총괄청 (기재부)</p>	<p>▶ 국유재산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 ▶ 일반회계 국유재산 관리·처분 ※ 일반재산: 캠프에 위탁 관리('13.6월 관리기관 일원화) 행정재산: 중앙관서에 사용승인 및 관리 위임</p>
<p>중앙관서</p>	<p>▶ 일반회계 행정재산 관리 ▶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처분 ※ 소관사무를 지자체, 공사·공단 등에 위임·재위임·위탁하여 관리</p>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더 불 어 민 주 당

조 응 천 위 원

<조용천 위원>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공단에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시설계획처 이호룡 처장, 042-607-3761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로부터 30m 이내 지역으로 이 구간 내에서 건축·토목공사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시 국토부 지침 및 운영기관인 철도공사의 내규에 근거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열차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근거 >>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5조(행위신고)

* (별표3) 운행선 안전관리원 배치, 차단공사 협의를 위한 업무담당자 지정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사.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안전관리 계획	- 운행선 안전관리원 배치	해당시 작성
	- 열차운행선 보호대책	
	-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계획수립	
	- 차단공사 협의를 위한 업무담당자 지정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제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①시행부서장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에 상주(常住)하여야 한다.

<조용천 위원>

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계획처 이호룡 처장, 042-607-3761

-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에 따른 수리 시 열차안전운행 및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 등급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관계기관(국토부, 철도공사)과 협의하여 작업현장의 규모, 투입장비, 열차안전운행 지장여부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합리적인 세부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 최근 3년간 일반건축공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현황

* 총 1,342건 중 A등급 34건, B등급 448건, C등급 860건

(단위 : 건)

구분	합계	배치	미배치	비고
A	34	34 (100%)	0 (0%)	철도안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작업 (주1회 점검)
B	448	304 (68%)	144 (32%)	열차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작업 (월1회 점검)
C	860	276 (32%)	584 (68%)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한 작업 (월1회 점검)
합계	1,342	614 (46%)	728 (54%)	

* 총 1,342건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개소는 614건(46%)이며, 배치개소 중 569건(93%)은 철도공사 요구, 45건(7%)은 철도공단 요구

(단위 : 건)

합계	배치			미배치
	계	배치주체		
		철도공사	철도공단	
1,342	614	569 (93%)	45 (7%)	728

김 윤 덕 위 원

<김윤덕 위원>

1. SR 및 코레일과 합동으로 철도시설 및 차량의 운행에 안전 관련 문제가 있는 곳을 조사하고, 상호 간에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설계획처 이호룡 처장, 042-607-3761

- 철도시설물 중 전차선 절연구간, 신호오인 우려개소 및 철도 차량운행이 빈번한 광주승무센터나, 호남차량센터 등에 대해서 공단, 한국철도공사, (주)SR 3개 기관이 합동 조사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 결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SR 자체 시행 안전진단 컨설팅 결과에 따른 안전 우려 개소에 대한 합동조사를 위하여 2020. 10. 23.(금) 3개 기관 합동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점검 시기, 구체적 대상,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위원>

2. 입찰심사기준에 보유인력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처 김태은 처장, 042-607-3721

- ☐ 공단은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 자료에 따라 보유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전기철도기술협력회, 철도신호기술협회 등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확인서를 바탕으로 기술자 등록현황 심사
- ☐ 아울러 등록된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자료(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도 공단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입찰심사 시 업체 보유인력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는 등 입찰관련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3. 노후 철도시설의 선제적 개량이 수도권 위주로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개량처 김용길 처장, 042-607-3781

-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선제적 개량으로 안전성 확보 및 적정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을 위해 「노후 철도시설 선제적 개량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 본 연구용역에서 노후 철도시설 개량 시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성능평가 등을 지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량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등 일반철도는 안전성(90%)을 위주로 평가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는 안전성 및 내구성, 경제성을 평가토록 하는 등 일반철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철도시설 성능개선(개량) 시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20.1)으로 성능개선 사업의 시행여부와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무화 함에 따라 수도권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며, 타 노선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공단은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시설개량 중기 투자계획(국토부, ‘21~’25)에 따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노후 철도시설의 선제적 개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4-1. 철도건설 사업자료 관리 현황?

정보관리처 정백 처장, 042-607-3231

- 건설과정 중에 발생한 철도건설 사업자료는 건설사업관리시스템 (CPMS)을 통해 관리되고, 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준공자료는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기록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준공 이후 개량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단계별(계획-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유형별 (노반, 궤도, 건축, 송변전, 전차선 등)로 분류·관리하여 자료가 효율적으로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종합정보시스템(현재 개발 중)과의 연계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철도시설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21.7월)되면 철도시설의 수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방대한 사업자료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료 관리시스템》

- **건설사업관리시스템** : 철도건설 현장 업무처리를 위해 설계사, 시공사 및 감리 등 협력사가 사용하는 사업관리시스템
- **기록관리시스템** : 철도건설 공단 기록물 통합관리, 준공도서, 간행물, 전자기록, 비전자기록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준공자료는 다중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전자파일, 도면을 포함하여 연계시스템(전자조달, CPMS)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김윤덕 위원>

4-2. BIM 설계 의무화에 따라 공단은 통합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기준심사처 박창완 처장, 042-607-4741

- 공단은 철도건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신규 발주하는 사업에 BIM을 적용하여 설계를 발주하고 있으며,
 - BIM으로 설계 발주된 사업은 설계→시공→준공 및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BIM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년 BIM 적용사업 현황>

- 인덕원~동탄 실시설계 BIM적용 계약('20.5)
- 대구 북연결선 T/K BIM적용 우선협상자 선정('20.7)
- 월교~판교 실시설계, BIM적용 입찰 공고(20.8)

- 또한, 효율적인 BIM 성과물 관리를 위해 계약자가 제출한 BIM 성과물을 공단 내부 ERP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통합시스템 구축은 현재 국가 R&D로 진행 중인 철도 BIM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가 R&D 용역>>

- 용역사 : 철도기술연구원외 16개 참여사
- 용역명 :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 통합 플랫폼 개발사업
- 기 간 : 2020.4. ~ 2024.12.

<김윤덕 위원>

4-3. 공단이 보유한 일부 서버와 스토리지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강 계획은?

정보관리처 정백 처장, 042-607-3231

- 장비 증가, 한정된 재원 등의 사유로 노후화를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비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 '20.12월까지 노후도, 고장이력, 중요도 등 장비 특성을 반영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장비별 상태평가를 통해 연차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장비 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연수 초과 장비현황》

(단위: 식)

구 분	장비수	내용연수 초과 장비	노후화율	내용연수 초과			
				5M~2Y	2Y~5Y	5Y~7Y	7Y 이상
서버	85	28	32.9%	5	10	4	9
스토리지	46	25	54.3%	16	2	6	1
네트워크	549	76	13.8%	2	33	39	2
보안	168	20	11.9%	7	9	3	1
합 계	848	149	17.6%	30	54	52	13

소 병 훈 위 원

<소병훈 위원>

1. 코로나19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산용지처 이재우 처장, 042-607-3811

- '20년 10월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용료 감면 지원 금액은 27억원이며, 연말까지 약 4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용료 감면지원액) 소상공인 24억원 / 중소기업 3억원

** ('20.12월까지 지원예상액) 소상공인 25억 / 중소기업 18억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사용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기재부 고시 및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기관(기재부 등)에 건의 등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8호, '20.4.1)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2호, '20.7.31)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용료 감면 지원 >

구 분		사용료 인하	지원기간	지원한도
소상공인	일반국유재산	재산가액의 3→1%	4.1~12.31 (9개월)	2천만원
중소기업	일반국유재산	재산가액의 5→3%	고시일~12.31 (약 5개월)	2천만원

□ 지역별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현황 ('20년 10월 현재 기준)

지원대상	구분	건수	금액(천원)	비고
소상공인	강원도	38	108,266	
	경기도	189	1,187,320	
	경상남도	29	150,123	
	경상북도	24	59,132	
	대구광역시	10	27,750	
	대전광역시	18	51,143	
	부산광역시	19	119,554	
	서울특별시	41	209,840	
	세종특별자치시	6	17,388	
	울산광역시	4	25,201	
	인천광역시	20	125,663	
	전라남도	7	13,884	
	전라북도	6	54,190	
	충청남도	20	115,201	
	충청북도	23	135,153	
소계		454	2,399,808	
중소기업	강원도	5	30,561	
	경기도	9	63,368	
	경상남도	9	38,755	
	경상북도	5	3,296	
	대구광역시	2	10,476	
	부산광역시	15	73,897	
	서울특별시	2	6,870	
	울산광역시	3	19,908	
	인천광역시	2	44,000	
	충청북도	1	7,126	
소계		53	298,257	
합계		507	2,698,065	

<소병훈 위원>

2-1. 터널경보장치 등 안전설비와 관련하여 일반철도는 해당 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데 누가, 어떻게, 언제, 선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지?

시스템개량처TF 김동철 처장, 042-607-3801

- ☐ 고속철도 전용선 구간은 안전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되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 일반철도는 시간당 18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선로 및 구간에 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철도건설 및 개량사업 설계 시 사업시행자인 공단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열차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와도 협의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설비 설치 규정》

- ☐ 안전설비 설치 규정
 - 철도건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32호)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03호)
- ☐ 안전설비 설치대상
 - 고속철도 전용선 구간
 - 단, 일반철도를 180킬로미터/시간 이상으로 운행하는 선로 및 구간에는 해당선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음
- ☐ 안전설비 종류(9종)
 - 차축온도검지장치, 터널경보장치, 보수자선로횡단장치, 분기기히팅장치, 레일온도 검지장치, 지장물검지장치, 기상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 선로변 지진감시설비

<소병훈 위원>

2-2. 안전설비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해서 안전설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스템개량처TF 김동철 처장, 042-607-3801

- 일반철도에 대하여도 안전설비 설치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관련 규정 개정*을 관계기관(국토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일반철도 안전설비 항목별 설치기준 등 포함

- 다만, 터널경보장치는 규정 개정 전 운행선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년부터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 일반철도 터널경보장치 설치 계획>

- 사업개요 : 연장이 200m 이상인 터널 418개소에 터널경보장치 설치 추진
- 사업기간 : '18년~'24년
- 추진현황

- '18. 8 ~ '20. 8 : 실시설계 시행
- '20. 11 : 경부선 터널경보장치 공사 발주 예정

* 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

김 회 재 위 원

<김희재 위원>

1-1. 지난해 국감에서도 체결장치와 관련해서 불량 부품 납품, 시공문제로 공단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 받았는데, 지난 1년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케도처 윤증원 처장, 042-607-3331

- 공단은 케도분야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케도용품 표준규격 합동검토반”을 운용하여 레일체결장치 치수오류 등 표준규격 11건을 제·개정한바 있으며,
- 앞으로도 품질 개선, 오류 수정 등 지속적인 규격관리를 통해 케도분야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준규격 합동검토반 운용현황》

○ 추진경위

- 2019. 7.31~8.13 : 규격오류 합동검토반 운용 및 이해관계 의견청취
- 2019. 8.14~8.23 : 규격 제·개정(안) 마련 및 이해관계 의견 제출
- 2019. 9. 3 : 공단 표준(잠정) 규격 제·개정(안) 전문위원회 시행
- 2019.11. 7 : 부적합개선 기술적합성 검토 합동워크숍 시행
- 2019.11.28 : 표준규격 제정(안) 기술적합성 검토회의 시행
- 2019.11. 8~12. 4 : 규격오류 개선방안 정리 (규격 및 부도)

○ 운용결과

- (대상규격) 레일체결장치 등 표준규격 11건 제·개정
- (개선사항) 불명확하고 품질측정이 어려운 치수 개선 및 허용공차 개선 등

<김희재 위원>

1-2. 잘못된 규격서를 5년간 방치하고 국민이 지적했어도 10개월간 방치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케도처 윤증원 처장, 042-607-3331

- 민원('19.11월)을 통해 확인된 철도궤도용품 'DELKOR형 레일 체결장치' 표준규격 오류를 조속히 개정했어야 하나, 실무직원의 실기로 개정이 지연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공단 표준규격에 '구상흑연 주철품' 규격의 화학성분이 잘못 표기되었으나, 실제 납품 된 '구상흑연 주철품'의 화학성분은 마그네슘(Mg)으로 이상 없음을 시험성적서로 확인하였습니다.
- 공단은 위 사항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에 표준규격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표준규격 개정사항(화학성분 Mn → Mg)》

당 초			개 정		
항 목	단 위	기 준	항 목	단 위	기 준
탄소 (Carbon)	%	2.5 이상	탄소 (Carbon)	%	2.5 이상
황 (Sulphur)	%	0.02 이하	황 (Sulphur)	%	0.02 이하
망간(Manganese)	%	0.09 이하	마그네슘(Magnesium)	%	0.09 이하

<김희재 위원>

1-3. 매년 안전불감증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궤도처 윤증원 처장, 042-607-3331

- ☐ 위원님 말씀처럼 표준규격 오류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표준규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준규격 합동 검토반’을 상시 운용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오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철도건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규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희재 위원>

2-1. 매년 같은 시공사들이 돌아가면서 하자발생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입찰 시 제재를 해야 하자발생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설계획처 이호룡 처장, 042-607-3761

- ☐ 2019년 3월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을 구성하여 하자보수 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단·공사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하자관리 절차서 제정 및 철도건설 참여업체 간담회(상·하반기) 등을 통해 하자보수가 신속히 완료 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 하자관리 절차서 주요내용 》

- 지역본부 하자관리 전담자 2명 배치
- 중대하자 및 장기지연하자 공단 시행
- 공단·공사간 하자관리 협의체 운영(분기별)
- 하자관리위원회 운영(이행 불성실 업체 별점부과 등)

《 ‘20년도 참여업체 및 철도공사 합동 간담회 시행 》

- 상반기(20. 6월) : 철도공단·철도공사, 철도건설 참여업체 14개사 참여
- 하반기(20.10월) : 철도공단·철도공사, 철도건설 참여업체 21개사 참여

- ☐ 앞으로도 공단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보수에 미온적이거나 불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하자관리위원회’를 통해 별점 부과 등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위원>

2-2. 공단이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까지 하는 주체라면 좀 더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하자를 줄일 것이라고 보는데?

시설계획처 이호룡 처장, 042-607-3761

- ☐ 위원님의 말씀처럼 공단은 철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하자 적기보수 및 이행을 향상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하자관리협의체’를 분기별로 구성·운영, 중대하자 및 장기지연하자 공단 시행, ‘하자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불성실 업체 제재 등 하자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자관리 절차서 주요내용('20.1월) 】

- ① 지역본부 하자관리 전담자 2명 배치 ② 중대하자 및 장기지연하자 공단 시행
③ 공단·공사간 하자관리 협의체 운영(분기별) ④ 하자관리위원회 운영(이행 불성실 업체 벌점부과 등)

- ☐ 앞으로도 공단은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까지 하는 시설물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 상 혁 위 원

<박상혁 위원>

1-1.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 대비 착공이 얼마나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는지?

광역민자철도처 김현성 처장, 042-607-3381

- ☐ 본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민자적격성조사, 협상 등의 절차가 필요해 재정사업보다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정) 기본계획고시('20.12) → 토크업체선정('21.6)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22.6)

* (민자) 민자적격성조사('21.3) → RFP고시('21.12) → 협상('22.12)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23.6)

《참고 사항》

☐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개요

- (사업개요)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45.7km 2복선화
- (총사업비/사업기간) 3조 4,477억원 / 2019 ~ 20245년
- (추진경위)
 - '16.08 : 민자적격성 검토 (민자추진 부적격, KDI)
 - '17.09 :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KDI)
 - '19.01 : 예타 면제사업 발표 (균형위)
 - '19.11 ~ :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박상혁 위원>

1-2. 재정절감을 위해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광역민자철도처 김현성 처장, 042-607-3381

- ☐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고속철도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비를 공단에서 분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사업 착수 시점도 앞당길 수 있어 민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속철도 공단분담 사례 >

사업명	총사업비	국고지원	공단조달	의결기구
경부1단계	12조 7,377억원	45%	55%	'93. 6. SOC건설추진위원회
경부2단계	7조 8,309억원	50%	50%	'06. 8. SOC건설추진위원회
호남	10조 6,987억원	50%	50%	'06. 8. SOC건설추진위원회
수도권	3조 9,017억원	40%	60%	'09. 12. 철도산업위원회

《참고 사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부담으로 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부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박상혁 위원>

1-3.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분담률 확대나 선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광역민자철도처 김현성 처장, 042-607-3381

□ 공단 사업비 분담률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평택~오송 병목구간 해소에 따라 운영사의 영업수입 증가와 더불어 공단의 선로사용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50~60%)보다 사업비 분담 비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공단의 적정 사업비 분담률은 재무성 검토 등을 통해 기본계획 과정에서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필요합니다.

* 선로용량이 현재 190회에서 380회로 확대되어 운영사의 영업수입 증가 및 투자비 회수 가능

○ 선투자는 공단 분담금 외 국고분을 공단에서 선투자하고 준공 후 정부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는 구조로, 재정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례)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공단에서 3,100억원 선투자('16~'17)

박 영 순 위 원

<박영순 위원>

1-1. 전차선 노동자들의 공단의 작업현장 위험 실태
폭로 기자회견,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입장은?

전철처 양인동 처장, 042-607-3501

- ☐ 전차선 공사는 열차운행이 종료된 후 야간에 작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도 최선을 다하는 전차선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습니다.
- ☐ 전차선 공사는 “전기공사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라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수행하나 일부 하도급 공사 대해서는 하도급 적정성 및 임금체불 발생여부 등을 수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단에서는 전차선 노동자들의 작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1-2. 전차선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철처 양인동 처장, 042-607-3501

- 전차선 작업은 공단이 지원하는 전철건설장비(모터카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제작·사용 중인 장비도 고용노동부 질의결과 사용가능한 합법적인 장비로 시공사에서 작업의 기동성(작업위치 신속한 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전차선 노동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A형 사다리 등 현장에서 제작·사용 중인 장비에 대하여 안전구조개선 및 안전보강방안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A형 사다리 용도 및 사용현황》

- 용도 : 전차선공사 및 유지보수 쏜 업무
- 국내·외 사용현황
 - (국외)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에서도 공사 및 유지보수용으로 통상적으로 사용
 - (국내)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기관과 시공사에서 전국 약 2,200대 사용중



<유럽형>



<한국,일본형>

<박영순 위원>

1-3. 지난해 5건, 올해 2건의 재해사망사고가 발생, 기재부로부터 중대재해 경고 조치를 통보(6.22) 받는 등 전차선 노동자 기자회견이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철처 양인동 처장, 042-607-3501

- 전차선 노동자 재해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해사망 사고 발생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의 안전강화대책과 더불어 고강도 자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특히, 전차선 공사에 특화된 다양한 개선방안도 도출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주요사항)》

- 주말(법정 공휴일) 작업통제 강화 : 임의작업 원천금지
- 고소작업 추락사고 재발방지 : 작업허가제 철저 준수(주기점검)
- 위험성평가(수시) 적기 이행 : 경미 사고도 작업중지 위험성 평가
- 행정조치 : 고소작업 안전관련 5대 서류 전수확인 및 안전대책 미이행시 조치
 - 안전관련 5대 서류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업허가제 서류

<박영순 위원>

1-4. 국토부 장관 주재 「건설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 (9.22)에 공단도 참여하였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철처 양인동 처장, 042-607-3501

안전계획처 이종범 처장, 042-607-3351

□ 공공기관 소관 건설현장부터 술선수범하고, 안전띠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 근절을 주문하였으며 주요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부분이 주도하여 건설안전 대책 적극 추진
- 일요일 근무 배제를 원칙으로 휴일작업 관리강화 필요
- 추락·협착 방지센서 등 스마트기기 확대 적용을 통한 사고 예방 등입니다.

□ 공단은 논의된 사항들이 일선 현장까지 전파되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으로써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1-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현장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철처 양인동 처장, 042-607-3501

- ☐ 공단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다양하고 세분화된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고, 현장의 VOC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주요사항)》

- 주말(법정 공휴일) 작업통제 강화 : 임의작업 원천금지
- 고소작업 추락사고 재발방지 : 작업허가제 철저 준수(주기점검)
- 위험성평가(수시) 적기 이행 : 경미 사고도 작업중지 위험성 평가
- 행정조치 : 고소작업 안전관련 5대 서류 전수확인 및 안전대책 미이행시 조치
 - 안전관련 5대 서류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업허가제 서류

□ **발생현황**

- 최근 5년간 전차선로 공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건수 : 3건

구 분	일 자	사고유형	피해정도	발생경위	비 고
1	'17. 1. 6	추락	부상(머리)	안전수칙 미준수	가설계단
2	'20. 4. 28	추락	부상(다리)	안전수칙 미준수	지지물
3	'20. 9. 14	추락	부상(허리)	조사 중	사다리차

□ **원인분석**

- 작업자의 고소작업 안전수칙 미 준수
-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소홀
- 작업현장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미흡

□ **대책수립**

- “전사적 안전관리 활동(3·3·3 안전활동 등)” 유무 및 고소작업 작업허가제 준수 점검 철저
- “공단 P-안전품질-09(위험성평가및관리)” 등 작업전 점검 및 작업 시 안전관리 준수사항 점검철저
- 안전사고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전차선 작업용 대차 (A형 사다리차) 관련 구조개선 등 추락방지 방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전차선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강화 방안 수립 시행('20.12월)
 - 고소작업 안전관리 강화 등 시방서 개정
 - 공단 업무프로세스에 의거 안전관리 일제 점검
 - 작업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전차선 작업장비 개선 등

<박영순 위원>

2-1. 내구연한이 지난 무선통화장치가 불량인 경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설계획처 이호룡 처장, 042-607-3761

- 현재, 무선통화장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시행세칙*에 따라 주기적 점검(상태점검, 동작점검 및 계측점검 등)을 시행하고, 주요부품 적기교체 등으로 무선통화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 사용 중입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세칙에 유지보수 점검기준·주기·방법·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차무선설비의 점검》

- 상태점검 : 무선설비의 동작 및 표출 등의 외관상태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점검
 - * 점검주기 : 설비별로 월1회, 분기1회, 반기1회, 년1회 등으로 시행
- 동작점검 : 무선설비의 기능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작, 조작 등으로 시험하는 점검
 - * 점검주기 : 설비별로 월1회, 분기1회, 반기1회, 년1회 등으로 시행
- 계측점검 : 무선설비의 성능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장비 등으로 계측하는 점검(각종 데이터 취득)
 - * 점검주기 : 설비별로 월1회, 반기1회, 년1회 등으로 시행
- 특별점검, 초기점검 등이 있음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선통화장치가 불량하여 안전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투자계획 마련 등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2-2. 경부고속철도 열차무선설비의 조속한 장비개량을 통해 고속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스템개량처TF 김동철 처장, 042-607-3801

- 공단은 경부고속철도 열차무선장치를 2021년까지 LTE-R* 방식으로 개량하기 위해 경부고속 1·2단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차무선설비의 조속한 장비개량을 통해 고속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LTE-R(LTE Based Railway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LTE를 철도환경에 최적화한 시스템으로, 열차 기관사와 관제사간 기관사 상호간, 기관사와 작업자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도록 제공

《경부고속선 LTE-R 개량사업 추진현황》

노선	연장(km)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경부고속 1단계 (서울~동대구)	267.5	681	‘18.11 ~ ‘21.12	시공중
경부고속 2단계 (동대구~부산)	130.7	236	‘20.10 ~ ‘21.12	계약중

<박영순 위원>

3.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에 대전조차장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토목설계처 김명규 처장, 042-607-4561

- 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자(원인자)인 대전광역시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경우 역 신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대전광역시(도시광역교통과, 팀장 김홍일)에서는 대전조차장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1년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단은 대전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대전조차장역 신설을 위한 용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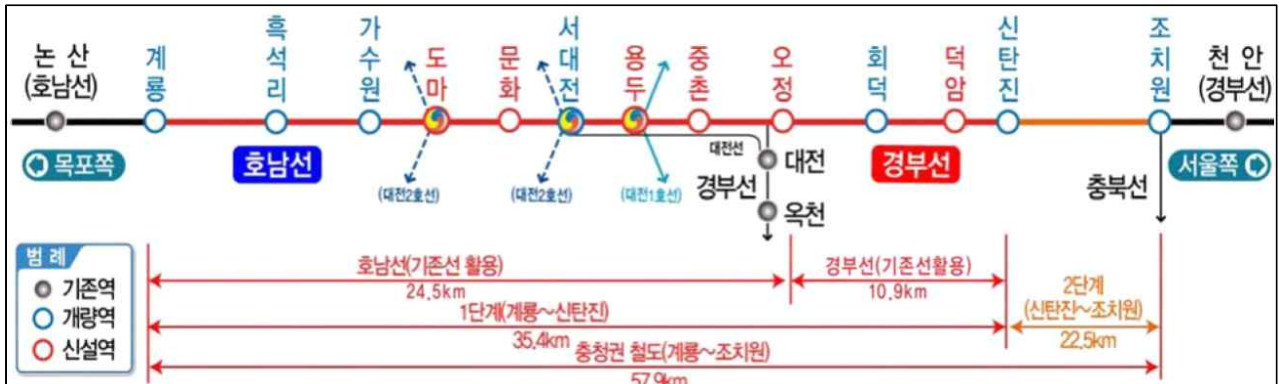
< 역 신설 관련 절차 >

- ① 원인자(지자체, LH 등 사업자)가 타당성조사를 시행
- ② 원인자 → 국토부에 역신설 의뢰 (공문)
- ③ 국토부 → 공단에 검토 의뢰 (공문)
- ④ 공단 검토 (필요시 검증용역 시행)
- ⑤ 공단 → 국토부에 검토 결과 보고 (공문)
- ⑥ 국토부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필요시)
- ⑦ 국토부 역신설 여부 결정 (내부 방침)
- ⑧ 결정내용 통보

붙임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현황

[노선도]



※ (환승역) 도마역(대전 2호선), 서대전(대전2호선), 용두(대전1호선),

- 노선개요 : 계룡~신탄진간 35.4km, 정거장 12개소
 - 기존선활용(35.4km), 신설역 6개소, 기존역 활용 6개소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15년 ~ 2023년/2,307억원
- 재원조달 : 국비70%, 지방비30%(차량구입비 240억원 : 국비 50%, 지방비 50%)
 - * 오정역(143억원), 용두역(384억원) : 대전시 100%분담 합의('18.03)
- 열차운영계획
 - 계룡 ↔ 신탄진 35.6분(설계속도 : 110km/h, 표정속도 59.6km/hr)
 - 중량전철 8편성(2량/1편성), 65회/일(첨두시 20회 12분, 비첨두 45회 20분)
- 추진경위
 - '16. 01월 : 예비타당성조사(KDI, B/C=0.95, AHP=0.513)
 - '16. 03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국토부)
 - '18.12.19 : 충청권 광역철도 기본계획고시(국토교통부 제2018-803호)
 - '19.03.05 :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계획(안) 변경수립(CEO)
 - '19.07~11 : 충청권 광역철도 타분야 설계 착수
 - * 신호 : '19.7월, 지반조사 : '19.8월 전기/통신 : '19.9월, 궤도 : '19.11월
 - '19.12.02 :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1.04준공)

천 준 호 위 원

<천준호 위원>

1-1.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동반성장 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였는데, 비정규직 포함 10명 내외로 근로 인원이 증가한 기업을 고용증대 우수기업이라 할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 김공수 실장, 042-607-3201

- 동반성장 협력펀드는 대전·충청권 소재 철도 중소협력사 중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저리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펀드이며,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은 전국 단위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협력사를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철도산업 전반에 일자리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절벽 등 경제상황을 감안,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인원수가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2% 이상인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 저리대출 지원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고용증대 우수기업 선정기준이 좀 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관리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1-2. 동반성장 협력펀드 취지에 맞게 자금 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 김공수 실장, 042-607-3201

-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동반성장 협력펀드 사업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위원

<허영 위원>

1. GTX-B 열차의 춘천 연장운행은 기존 역사 보수 및 별도의 선로 개량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광역민자철도처 김현성 처장, 042-607-3381

- GTX-B 열차의 춘천 연장운행은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광역철도 범위(서울시청, 강남역으로부터 40km 이내)를 넘어*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울시청에서 춘천역까지는 75km, 기준 40km 이내 초과

-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열차 연장운행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와 기존 역사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등 공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사항》

□ GTX-B 사업개요

- (사업구간) 송도~마석 80.1km(신설 57.2km, 공용 22.91km), 정거장 13개소
- (총사업비) 5조 7,351억원
- (추진경과)
 - '19. 8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 1.0) 및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KDI)
 - '20. 1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21.4)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①항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 가. 수도권 :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허영 위원>

2. 철도역사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대에 지자체가 50%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는데, 향후 정부 예산이 100%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시설개량처 김용길 처장, 042-607-3781

- ☐ 국가소유 철도역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와 외부출입구 이동시설 50% 미만의 역사에 대하여 ‘승강설비 추가설치 중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승강설비를 매년 추가설치 중에 있습니다.
- ☐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정책의 취지를 감안하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정부의 재정여건상 「철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설개선 요구자(원인자,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3-1.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삼척 지구 이주 보상과 관련하여 평당 분양가가 4배나 폭등하는 등 당초 협약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유?

일반철도처 한상연 처장, 042-607-3481

- 우리 공단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삼척 지구 편입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단지 분양가를 평당 287,000원으로 책정하여 이주민 등과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만, 협약서 작성 시 분양단가 검토에 오류가 있어 현 시점에서 토지보상법이 정한 분양단가로 다시 산정함에 따라 평당 분양가가 높아져 부득이하게 공단과 이주대책 대상자 간 분담 비율 등을 반영한 분양가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당초 협약과 달리 분양가가 높아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주대책 대상자의 입장에서 분양단가 조정이 당혹스러운 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와 분담 비율을 적용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존 협약서를 이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공단은 그동안 분양가와 별도로 이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 총사업비 확보, 용지 편입 및 보상 관련 협의 등을 추진해왔으나,
 -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 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보상이 불만 및 환경 피해 등을 사유로 이주단지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 또한, 지역 여론의 특혜 분양 시비 및 삼척시의 성토재 지원이 불명확한 사실 등 협약서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허영 위원>

3-2. 지금 책정된 분양가가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
가액이라고 하는데, 당초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단가를 산정하였는지?

일반철도처 한상연 처장, 042-607-3481

-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서 상 분양단가 산정 과정에서
실무 직원의 착오가 있었으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 분양단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분담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협약서 작성 시 공단 책임자와 담당자는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3-3. 이 사안에 대한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대책은?

일반철도처 한상연 처장, 042-607-3481

- ☐ 우리 공단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원하는 마달동으로의 이주단지 조성을 검토·추진해왔으나, 마달동 토지 소유주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 및 이주대책 대상자의 약정서 미체결 등으로 인하여 마달동으로의 이주단지 조성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 ☐ 이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대표와 이주단지의 위치 조정 및 분리조성방안 등을 협의(2020. 10. 13.)하였으나, 이주대책 대상자 대표는 마달동으로 이주단지 조성 및 기존 협약서 준수를 요구하였고, 미 이행시 소송 진행을 예고하였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께서 삼척시 마달동 이주단지 조성만을 요구할 경우 더 이상 이주단지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 보상법)등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다만, 이주대책 대상자께서 마달동 이주단지 조성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이주단지 위치조정(분리조성방안 포함) 및 토지보상법 등에 근거한 이주대책의 수립을 협의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홍 기 원 위 원

<홍기원 위원>

1-1. 수서고속철도 지제역사는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시설계획처 이호룡 처장, 042-607-3761

- ☐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사는 개통('16.12월)이후 천정부 등 일부 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 ☐ 주요 누수 원인은 옥상층 배수구 및 태양광패드 등 일부 접속 부분의 방수공사 시공 품질이 미흡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발생한 누수 22개소에 대하여 금년 8월까지 단계별로 모두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 * 경부선 지제역사와 접속부 및 SR지제역사 천정부 등 22개소 조치 완료
- ☐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공 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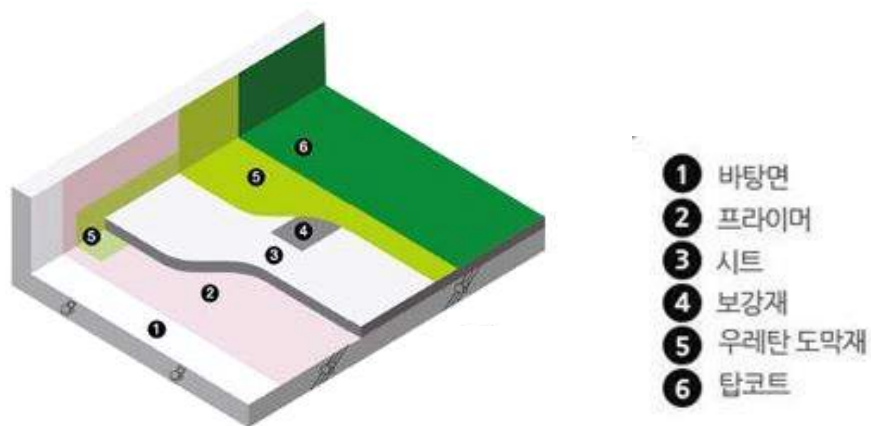
<홍기원 위원>

1-2.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설계획처 이호룡 처장, 042-607-3761

- 지제역사 방수는 1차 프라이머 도포 후 2차 시트방수지를 부착하는 시트방수 공법으로 설계되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공 단계에서 옥상층 방수 공사 시 일부 시공 품질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누수 발생 개소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시트방수공법 표준상세도)



<홍기원 위원>

1-3. 작년 12월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향후 누수 발생 시 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설계획처 이호룡 처장, 042-607-3761

-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에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 하자관리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동일사항 재발생 시 시공사에서 조치

- 하자조치가 완료된 이후(20. 1월) 동일사항 재발생이 아닌 경우의 유지보수는 공단-SR간의 「SR고속철도 역사 등 운영시설 사용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주)SR에서 담당합니다.

참고자료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사 신축공사 입찰공고 시 계약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췌

- 제33조(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함

□ 공사계약 특수조건 발췌

- 제18조(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설계서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하며, 준공 후 제반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복구비용,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SR고속철도 역사 등 운영시설 사용계약서(공단-SR) 요약>

- 제15조(유지보수 책임) (주)SR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사 등 운영시설을 보존할 책임과,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홍기원 위원>

2-1. 고속열차, 고속철도의 세계시장은 어떠하며 현재 우리의 개발력 수준은?






고속철도처TF 정대호 처장, 042-607-4711

□ 고속열차 속도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09~'12년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 R&D를 통하여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HEMU-430X를 개발하였으며,
- 경부고속철도 '울산→고모' 구간에서 최고 시험속도 421.4km/h를 달성('13.3월)하고, 400km/h 주행속도에서의 주행안전성, 집전 성능, 추진성능 및 제동성능 등 차량 주요성능 기준치를 만족하였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열차 최고속도와 운영속도>

(단위:km/h)

국가별	속도현황	운영 속도	최고 속도
일본	 320 km/h / 603 km/h	320	603
프랑스	 320 km/h / 575 km/h	320	575
중국	 300 km/h / 501 km/h	350	501
대한민국	 300 km/h / 421 km/h	300	421
스페인	 320 km/h / 404 km/h	320	404
이탈리아	 300 km/h / 400 km/h	300	400
독일/벨기에	 320 km/h / 368 km/h	320	368

※ (자료출처) 고속철도 고속화 및 시스템 최적화 검토용역 보고서(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7.3)

<홍기원 위원>

2-2. 세계에서 세 번째로 400km/h가 넘는 고속열차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속철도 운행이 여전히 답보상태인 이유는?

고속철도처TF 정대호 처장, 042-607-4711

□ 그동안 400km/h급 시설계획을 검토할 상용노선이 없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차량개발을 완료('12년)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 일부구간 Test-Bed*를 제외하고 400km/h급 시설계획을 검토할 상용노선이 없었습니다.

* (하선) 공주→익산(28km, 54~82km), (상선) 정읍→익산(28km, 100~128km)

□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구간이 400km/h급 인프라 도입 최적 노선으로 검토되어 상용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2-3. 공단에서 400km/h급 고속철도 관련 분야별 기술
용역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남은 과제는?

고속철도처TF 정대호 처장, 042-607-4711

- 공단은 현재 400km/h급 인프라에 대한 분야별 성능검증 절차,
설계 및 유지관리 등 제반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노반, 궤도, 열차제어시스템 등 분야별 기술검토를 통하여 안전성
인증, 성능검증, 시험/시운전 및 사용개시 절차 등을 마련 중에
있으며,
- 상용노선 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 및 유지보수기준 등
관련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입니다.

<홍기원 위원>

2-4. 400km/h급 고속철도 상용화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 구간이 최상의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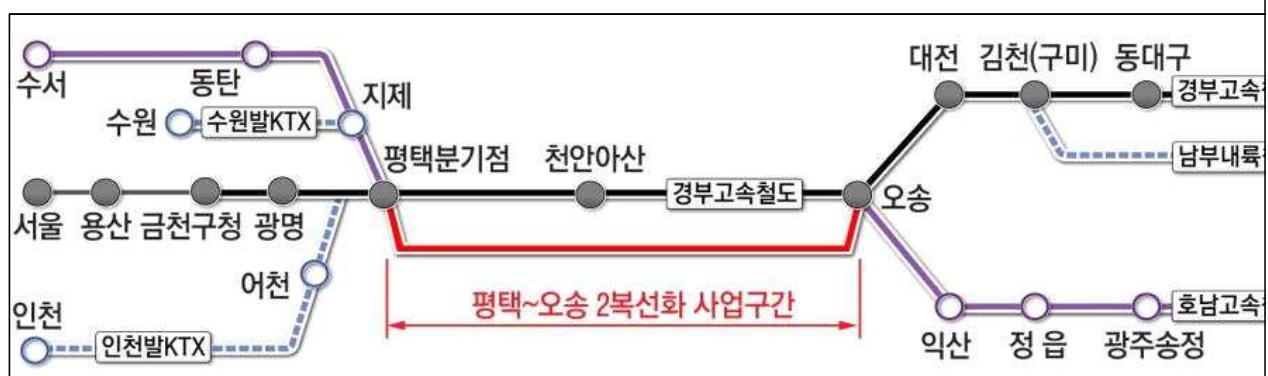
고속철도처TF 정대호 처장, 042-607-4711

- 위원님의 말씀대로 평택~오송 2복선화 구간이 400km/h급 고속 열차 도입을 위한 상용노선에 최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현재 터널 단면적*, 선형조건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적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속철도 터널 단면적

구 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	400km/h급
터널단면적	107 m^2	97 m^2	89 m^2	97.2 m^2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개요>



- (사업개요)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45.7km 2복선화
- (총사업비) 3조 4,477억원
- (사업기간) 2019 ~ 2024년(사업계획 적정성기준, KDI)
- (추진경위)
 - '16.08 : 민자적격성 검토 (민자추진 부적격, KDI)
 - '17.09 :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KDI)
 - '19.01 : 예타 면제사업 발표 (균형위)
 - '19.02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KDI)
 - '19.11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10개월)

<홍기원 위원>

3-1. 퇴직 임직원을 통한 첼피아 부활 우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혁신성과처 정기연 처장, 042-607-3161

감 사 실 김종호 실장, 042-607-3041

기준심사처 박창완 처장, 042-607-4741

-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은 ‘첼피아’라는 오명을 씻고 업체 간 유착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14년 ‘철도 신뢰회복 미래발전 TF’를 구성하여 4개 분야 34개 과제를 도출하여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매년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취약 분야를 지속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VOC를 적극 수렴, 불공정 계약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18년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총 220개의 VOC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적정공사비 지급, 갑질 근절,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과제를 이행하였으며, ‘19년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한 60개의 과제, ‘20년에는 하도급사 임금지불시스템 개선 등 42개의 과제를 도출하여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종합청렴도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국토부 산하기관 중 상위등급(2등급)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16	‘17	‘18	‘19
종합청렴도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반부패시책평가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 앞으로도 공단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청렴성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우리 공단은 임직원행동강령에 알선·청탁 등 금지(2015.10.21) 및 재취업퇴직자에 사적접촉 신고(2013.7.17) 조항을 신설하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8년 4/4분기 이후 재취업 퇴직자 사적접촉 0건

《국가철도공단 임직원행동강령》

· 제13조 (알선·청탁 등 금지) <중략>

- ④ 임직원은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청탁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공단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가 비용을 부담(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함께 하는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에 또는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 향응

-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터키 등 대형공사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심의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임감사 주관 고강도의 윤리교육과 사전 청렴감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의위원 선정 이후부터 위원별 1:1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주말포함, 출근부터 거주지 귀가 시까지 밀착·집중 청렴감찰 시행하고, 규정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철도 설계 분야 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심의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임감사 주관 고강도의 윤리교육과 사전 청렴감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 심의위원 선정 이후부터 위원별 1:1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심의위원과 입찰참여업체 관계자 간 사전 접촉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주말을 포함하여 출근부터 거주지(자택 및 숙소 등) 귀가 시까지 밀착·집중 청렴감찰을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사후 청렴감찰 활동은 심의평가 후 약 6개월 동안 수시로 심의위원을 방문하여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및 공단 「기술자문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윤리행동강령」 등에 따른 부패행위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붙임 3

감리 및 설계 중심제 평가의 공정성 강화

- 감리 및 설계 중심제 평가에 있어 평가 전부터 퇴직자의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 시 평가 당일에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 선정 시 공단 감사실 및 입찰 참여사의 입회하에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내부 심의위원의 경우 선정 즉시 청렴지킴이 입회하에 평가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퇴직자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차단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직원 청렴교육을 통해 더욱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심제 평가 시 공단 공정성 강화 방안 》

□ 평가 전

- 평가 20일 전 입찰참여업체 등 퇴직자 공단 출입제한
- 입찰참여사 공정경쟁 당부 간담회 및 내부위원 청렴교육 시행
- 평가전 참여사 사전 평가 설명회를 통해 평가계획 사전 공유
- 평가위원 후보군에 대한 감사실 감찰활동 강화

□ 심의위원 선정 시

- 심의위원 선정 시 감사실 입회 및 입찰참여업체가 직접 선정
- 내부 심의위원 선정 즉시 청렴지킴이 동행
- 심의위원 섭외 시 통화내용 녹취 시행

□ 평가 시

- 평가 시 성과물에 대하여 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설계 및 감리평가)
- 평가 발표자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발표 시행(설계 및 감리평가)
- 평가 사유서 작성으로 공정한 평가 유도
- 평가장 CCTV촬영

<홍기원 위원>

3-2. 최근 5년간 관리자급 이상 퇴직 직원 현황?

인사복지처 이현철 처장, 042-607-3641

□ 최근 5년간 관리자급 이상 퇴직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관리자급 이상 퇴직자 현황]

연번	성명	퇴직 시 소속	퇴직 시 직위	퇴직일	퇴직사유
1	송OO	KR연구원	처장	16.01.22	명예퇴직
2	박OO	기술본부	부장	16.03.10	명예퇴직
3	유OO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부장	16.04.13	명예퇴직
4	박OO	총청본부	처장	16.06.30	명예퇴직
5	이OO	수도권본부	처장	16.06.30	명예퇴직
6	이OO	시설본부	처장	16.06.30	명예퇴직
7	전OO	영남본부	부장	16.06.30	명예퇴직
8	정OO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단장	16.07.18	명예퇴직
9	정OO	수도권본부	단장	16.07.20	명예퇴직
10	김OO	수도권본부	부장	16.07.20	명예퇴직
11	하OO	감사실	실장	16.08.19	명예퇴직
12	나OO	영남본부	처장	16.08.19	명예퇴직
13	김OO	부이사장	처장	16.08.23	명예퇴직
14	김OO	수도권본부	부장	16.08.31	명예퇴직
15	김OO	공단근무	처장	16.10.26	파면
16	권OO	공단근무	처장	16.10.26	파면
17	최OO	공단근무	본부장	16.10.26	파면
18	서OO	공단근무	부장	16.10.26	파면
19	권OO	총청본부	본부장	16.12.20	명예퇴직
20	김OO	강원본부	처장	16.12.31	명예퇴직
21	서OO	기술본부	처장	16.12.31	명예퇴직
22	정OO	기술본부	처장	16.12.31	명예퇴직
23	최OO	기술본부	처장	16.12.31	명예퇴직
24	최OO	총청본부	처장	16.12.31	명예퇴직

연번	성명	퇴직 시 소속	퇴직 시 직위	퇴직일	퇴직사유
25	허OO	총청본부	처장	16.12.31	명예퇴직
26	이OO	안전품질실	부장	16.12.31	명예퇴직
27	박OO	공단근무	부장	17.01.24	파면
28	박OO	기획재무본부	본부장	17.01.24	의원면직
29	김OO	이사장	감사	17.02.22	임기만료
30	하OO	공단근무	처장	17.03.13	파면
31	김OO	기술본부	처장	17.03.31	명예퇴직
32	유OO	기술본부	부장	17.03.31	명예퇴직
33	허OO	강원본부	부장	17.03.31	명예퇴직
34	임OO	수도권본부	부장	17.04.30	명예퇴직
35	박OO	기술본부	부장	17.05.23	명예퇴직
36	조OO	기술본부	부장	17.06.12	명예퇴직
37	백OO	시설장비사무소	전문직	17.06.14	명예퇴직
38	이OO	총청본부	부장	17.07.27	명예퇴직
39	여OO	영남본부	부장	17.10.31	명예퇴직
40	강OO	이사장	이사장	17.11.13	의원면직
41	이OO	강원본부	부장	17.12.31	명예퇴직
42	김OO	부이사장	부이사장	18.02.19	의원면직
43	이OO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18.02.19	의원면직
44	박OO	영남본부	전문직	18.03.15	명예퇴직
45	김OO	시설본부	본부장	18.04.27	의원면직
46	김OO	기술본부	본부장	18.04.27	의원면직
47	이OO	건설본부	본부장	18.04.27	의원면직
48	김OO	강원본부	처장	18.05.28	명예퇴직
49	고OO	해외사업본부	처장	18.06.30	명예퇴직
50	나OO	안전품질본부	전문직	18.06.30	명예퇴직
51	이OO	수도권본부	본부장	18.10.12	명예퇴직
52	천OO	수도권본부	부장	18.10.12	명예퇴직
53	양OO	수도권본부	처장	19.01.01	명예퇴직
54	김OO	호남본부	부장	19.01.01	명예퇴직
55	오OO	안전품질본부	본부장	19.01.01	명예퇴직
56	이OO	영남본부	처장	19.01.01	명예퇴직
57	정OO	건설본부-설계실	처장	19.01.01	명예퇴직
58	연OO	경영본부	처장	19.01.01	명예퇴직
59	정OO	시설본부	전문직	19.01.01	명예퇴직
60	기OO	수도권본부	단장	19.03.31	명예퇴직
61	김OO	기술본부	부장	19.03.31	명예퇴직
62	안OO	강원본부	부장	19.03.31	명예퇴직
63	이OO	수도권본부	처장	19.04.16	명예퇴직

연번	성명	퇴직 시 소속	퇴직 시 직위	퇴직일	퇴직사유
64	박OO	이사장	감사	19.04.17	임기만료
65	김OO	안전품질본부	본부장	19.06.01	명예퇴직
66	공OO	안전본부	전문직	19.06.30	명예퇴직
67	이OO	공단근무	전문직	19.08.23	의원면직
68	이OO	기술교육연구원	부장	19.08.30	명예퇴직
69	김OO	건설본부	부장	19.08.30	명예퇴직
70	김OO	기술교육연구원	원장	19.08.31	명예퇴직
71	김OO	수도권본부	부장	19.09.19	명예퇴직
72	김OO	수도권본부	부장	19.09.19	명예퇴직
73	석OO	영남본부	본부장	19.09.19	명예퇴직
74	전OO	기술본부	처장	19.09.19	명예퇴직
75	조OO	영남본부	부장	19.09.19	명예퇴직
76	조OO	수도권본부	부장	19.09.19	명예퇴직
77	함OO	수도권본부	부장	19.09.19	명예퇴직
78	이OO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19.09.19	의원면직
79	권OO	충청본부	부장	19.11.18	명예퇴직
80	김OO	기술본부	처장	19.11.18	명예퇴직
81	유OO	호남본부	처장	19.11.18	명예퇴직
82	장OO	충청본부	부장	19.11.18	명예퇴직
83	조OO	강원본부	본부장	19.12.31	명예퇴직
84	신OO	기획본부	본부장	19.12.31	의원면직
85	오OO	건설본부-설계실	부장	19.12.31	명예퇴직
86	최OO	호남본부	본부장	19.12.31	명예퇴직
87	이OO	경영본부	본부장	20.05.06	당연퇴직
88	고OO	공단근무	부장	20.05.08	당연퇴직
89	전OO	건설본부	본부장	20.05.11	당연퇴직
90	박OO	기술본부	본부장	20.05.11	당연퇴직
91	김OO	시설본부	본부장	20.05.11	당연퇴직
92	노OO	인재개발연구원	원장	20.05.16	명예퇴직
93	전OO	부이사장	부이사장	20.06.09	당연퇴직
94	김OO	수도권본부	처장	20.08.16	명예퇴직
95	문OO	건설본부	처장	20.08.16	명예퇴직
96	박OO	기술본부	부장	20.08.16	명예퇴직
97	이OO	강원본부	부장	20.08.16	명예퇴직
98	한OO	안전본부	부장	20.08.16	명예퇴직
99	정OO	강원본부	처장	20.09.16	명예퇴직
100	김OO	해외사업본부	전문직	20.09.16	명예퇴직
101	송OO	영남본부	본부장	20.09.23	명예퇴직
102	석OO	충청본부	처장	20.10.16	명예퇴직
103	이OO	기술본부	처장	20.10.16	명예퇴직

국 민 의 힘

송 언 석 위 원

<송언석 위원>

1. 청렴 관련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와 청렴 이미지 개선 방안은?

혁신성과처 정기연 처장, 042-607-3161

- ☐ 종합청렴도는 전년도보다 1등급 향상되었으나, 외부청렴도 등급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여러 평가 항목 중에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 편의 제공 등의 비위 행위가 아닌, 업무처리 절차의 공개성, 우월적 지위 등 갑질이 있었던 것이 주된 조사 결과로 파악되었습니다.
-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등 입찰 관련 규정이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VOC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도 공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청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 동 만 위 원

<정동만 위원>

1-1.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 및 개량이 계획 대비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스템개량처TF 김동철 처장, 042-607-3801

- 현재까지 586개소 중 45개소를 설치완료(7.7%) 하였으며, '25년까지 전국 노선에 구축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수도권 광역철도 구간 58개소 중 '20년 18개소, '21년 40개소를 완료할 예정이며,
 - 수도권고속철도(수서~지제, 2개소) 구간을 '22년까지 구축하고, 고속 및 일반철도 구간은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대상노선	구축기간
기시행	○ 강릉선, 동해선, 대구선 설치완료(45개소, 92km)	'17.07. '19.12.
1단계	○ 철도노선 및 이용객이 집중된 수도권 광역철도 9개 노선에 대해 우선 추진(58개소, 113km) - 구 간: 수도권 광역철도 분당선 등 9개노선 - 대상개소: 58개소(113km)	2017. 8. 2021.12.
2단계	○ 일반·고속철도 구간은 예산을 확보하여 열차이용객 및 노선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순차적 시행(483개소, 811km) - 구 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지제간 - 대상개소: 2개소(57km) - 구 간: 경부고속철도 광명~부산간 - 대상개소: 82개소(168km) - 구 간: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간 - 대상개소: 27개소(45km) - 구 간: 경부선외 2개소(호남선, 전라선) - 대상개소: 89개소(88km) - 구 간: 태백선 외 17개노선 - 대상개소: 283개소(341km)	2020.10. 2022. 6. 2021. 3. 2022.12. 2021. 3. 2022.12. 2021. 7. 2022.12. 2022. 3 2025.12.

<정동만 위원>

1-2. 수도권 이외 지역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기간을 5년씩이나 잡는 등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시스템개량처TF 김동철 처장, 042-607-3801

- ☐ 철도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는 '22년까지, 나머지 노선은 '25년까지 구축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를 위한 예산 및 작업시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기간이 장기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사업규모는 '21년 이후 약 2,000억원이 소요되어, '25년까지 구축하기 위해서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열차 종료 후 야간에 작업(하루평균 2~3시간)이 가능하므로 공사가 장기간 소요됩니다.
- ☐ 향후, 재난방송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국토부, 철도공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동만 위원>

1-3. 신설된 강릉선에도 수신 불량 구간이 있는 사유는?

시스템개량처TF 김동철 처장, 042-607-3801

- ☐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재조사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20년 4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19년 강릉선의 경우 약 24% 구간에서 DMB/FM 수신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 양호비율 : DMB 35%, FM 24%
 - '20년 7월 한국전파진흥협회(방송통신위원회 대행기관)에서 강릉선을 측정한 결과, 약 63% 구간에서 DMB/FM 수신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양호비율 : DMB 87%, FM 63%
- ☐ 기 설치된 터널의 재난방송 수신상태를 관련기관 합동으로 다시 점검하여 수신 불량 구간은 '21년 상반기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1-4.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를 서두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설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개량처TF 김동철 처장, 042-607-3801

- ☐ 현재, 재난방송수신설비 계획은 '25년 말까지 전국 200m 이상 터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국토부 및 재정당국과 예산증액 등 적극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강릉선 등 기 설치된 터널의 재난방송 수신상태를 관련기관 합동으로 '20년까지 재점검하여 수신이 불량한 구간은 '21년 상반기까지 조치하겠습니다.

* 강릉선 31개소, 동해선 13개소, 대구선 1개소